

제10권 15호

2020. 7. 20~2020. 8. 2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
| 이슈분석 |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 금융경영브리프 | Lloyds, 보험 및 WM 사업 강화로 저금리 대응
코로나19로 글로벌 은행 채널 수요 변화 가속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금통위,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시사
외 환: 호재든 악재든 방향성을 기다리며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오영선(ohys)
연구원 김효섭(hyosupk)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 06 **이슈분석**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10 **금융경영브리프** Lloyds, 보험 및 WM 사업 강화로 저금리 대응
코로나19로 글로벌 은행 채널 수요 변화 가속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금통위,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시사
외 환: 호재든 악재든 방향성을 기다리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성*

김 혜 미 연구위원(hmikim@hanafn.com)

네이버통장 출시로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논란이 제기되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경쟁 심화로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금융안정성 저하하는 단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나 빅테크가 별도 금융업 라이선스나 규제 적용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와 달리 규모가 큰 빅테크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빅테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부문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독점성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네이버통장 출시로 촉발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논란

2020년 6월, 일정 조건 아래 연 3%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네이버통장’이 출시되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중개하고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CMA상품인 ‘네이버통장’은 출시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통장’이라는 명칭사용에서부터 상품명에 책임지는 금융회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네이버만 강조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네이버파이낸셜이 CMA상품을 중개했으니 금융투자중개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란도 야기되었다. ‘네이버통장’ 출시에서 시작된 논란은 결국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네이버통장’ 출시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논란이 제기

2020년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bigtech)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2년만에 흑자 구조로 전환시킨 데 이어 카카오페이증권출을 출범시켰으며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도 네이버페이부문을 분사하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 단순한 결제와 송금을 넘어 주식, 보험, 예적금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주요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화두였다. 핀테크들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력과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빅테크가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

등 전문기술을 금융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금융회사에 비해 고객기반이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초기 기대만큼 금융업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BAT(Baidu, Alibaba, Tencent), 국내의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브랜드 인지도, 풍부한 고객 데이터, 데이터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020년 6월말 기준 23.4조원, 네이버는 43.8조원으로 국내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 합계(43.8조원)를 상회하고 있으며 각각 3천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기존 은행들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장점과 잠재적인 리스크

핀테크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존 은행권에서 취급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FSB, BIS 등 주요 국제감독기구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와 빅테크 실패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먼저 빅테크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기존 은행들의 대응으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중국 알리페이와 같은 빅테크 펀딩(funding)상품들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빅테크들이 페이포인트 충전 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1~5%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빅테크 펀딩상품이 일반화될 경우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높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게 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은행의 예금규모 감소와 조달안정성 저하로 정작 대출자금을 예금으로 조달하지 못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빅테크의 펀딩상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처럼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규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별로 리스크관리 및 운용방침에 따라 자금이 예금, 채권 등 금융시스템으로 유입될 수 있으나 그림자금융 영역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거나 혹은 개별 회사의 경영 실패 시 펀딩상품에 대규모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빅테크가 대형화될수록 유출입으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빅테크의 대출 취급으로 기존 은행들이 시장방어를 위해 대출금리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리스크보다 낮게 대출금리가 산정될 수 있다. 리스크 대비 낮은 가격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되면서 차주의 과다차입이 발생, 결국은 대규모 부실채권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빅테크의 데이터 기반 심사방식의 대출은 아직까지 그 완결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은행에는 경기하강기에 대출 축소유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빅테크에는 경기순응성을 제어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경기하강기에 대출축소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빅테크는 은행과 같은 관계기반 대출이 아닌 데이터기반 대출이기 때문에 경기하강 시 나타나는 데이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빅테크가 대형화되었을 때 리스크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FSB는 대형화된 빅테크가 금융산업에서 상품 공급자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빅테크의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빅테크는 핀테크와 달리 대규모 상장회사여서 지배구조나 리스크 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편이나 금융업에 대한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비해 리스크관리 문화나 지배구조, 소유구조는 불투명하다.

대형화된 빅테크 회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반경쟁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와 데이터분석역량을 보유한 빅테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부문을 포함한 주요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빅테크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향후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한 뒤 반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진출장벽을 구축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고객들이 전환하지 못하도록 전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기업들처럼 강제적 묶음 판매, 잠재적인 진출자 인수 등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들도 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이 지불 의향이 있는 가격을 계산하여 고객별 가격차별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빅테크 대출취급 시
과다차입 이슈,
경기순응성 확대 등의
문제 야기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한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

해외금융감독기구의
공정경쟁여건,
금융안정성 문제제기

⋮ 글로벌 금융감독기구들의 빅테크에 대한 입장 선회

얼마전까지만 해도 핀테크, 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촉진하여 혁신을 추구했던 해외 감독기관들은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경쟁 여건이나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금융안정성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에서는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 영역의 제한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BIS에서도 금융시스템 내에서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빅테크도 은행의 행위(banking activities)를 수행할 경우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SB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무 수행이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빅테크에 적용하는 규제의 범위나 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빅테크의 금융업무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개별 법인(entity-based)에 근거한 방식에서 행위별(activity-based)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핀테크에 대해 “無규제”로 시작하여 문제가 생길 때 사후적인 규제를 적용했던 중국에서도 빅테크의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어바오 등 빅테크의 1일 인출금액 및 1인당 예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송금결제플랫폼에 예치된 예수금에 대해 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와 유사하게 중앙은행 예치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3자 지급결제플랫폼의 청산전담기구인 왕렌(NUC)을 신설하여 지급결제 업체의 청산결제 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금융의 투명성과 지급결제업자의 지급불능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

⋮ 금융안정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 적용이 필요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필요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과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이 꾸준히 완화되면서 핀테크 및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 뿐만 아니라 빅테크도 금융혁신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금융업 라이선스나 별도의 영업·건전성규제, 대주주적격성 이슈 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인 빅테크의 금융업 수행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와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별다른 규제없이 수행되는 빅테크의 선불충전이나 대출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규제나 건전성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액의 잔액이 2019년말 1.7조원으로 웬만한 지방저축은행 수신규모에 달하지만, 간편결제업자가 파산하거나 횡령한다고 해도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제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간편결제업자의 선불충전금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방식 등의 규제 도입을 통해 충전금 원금 보전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테크의 다양한 사업영역들이 금융과 결합될 경우 더욱 복잡해지고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영역과 금융영역간 연결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빅테크의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 접근성으로 인해 향후 빅테크가 금융뿐만 아니라 주요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독점성에 대한 규제도 갖춰져야 한다. 아울러 빅테크가 개인 및 비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혁신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 데이터 공유로 인한 사기,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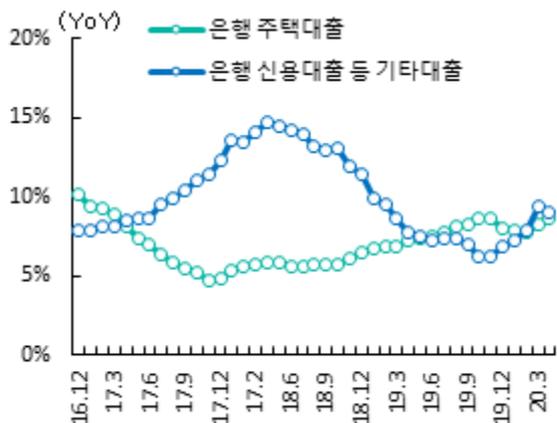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황 성 영 수석연구원(sungyoung.hwang@hanafn.com)

현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17.6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 되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또한 서울지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인근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추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집값상승의 기대감도 높아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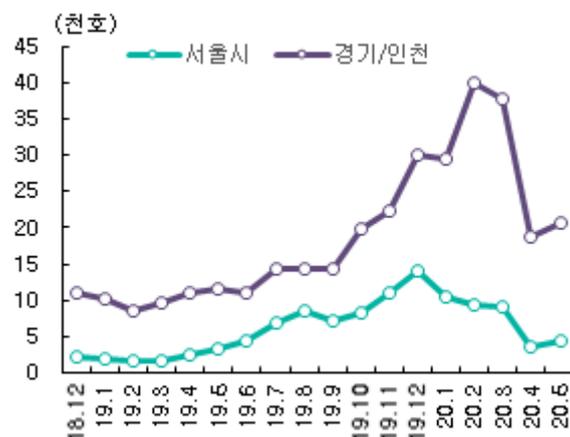
- 2017.6월 이후 고강도 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이 급증,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상승
 - 2017.6월 ‘6.19대책’을 시작으로 2020.7월 ‘7.10대책’까지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LTV 규제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표, 시행 중
 -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신용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어 주택구입 자금수요가 신용대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발생
 - '16년말~'18.4월 증가율 변화: 주택담보대출 -4.3%p 하락, 신용대출 6.8%p 상승
 - '19년말~'20.4월 증가율 변화: 주택담보대출 0.6%p 상승, 신용대출 2.2%p 상승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점적으로 규제하자 인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적 풍선효과가 발현
 - '19년말~'20.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2.5% 감소, 경기/인천은 33.5% 증가

■ 은행 신용대출 증가율 확대



자료 : 한국은행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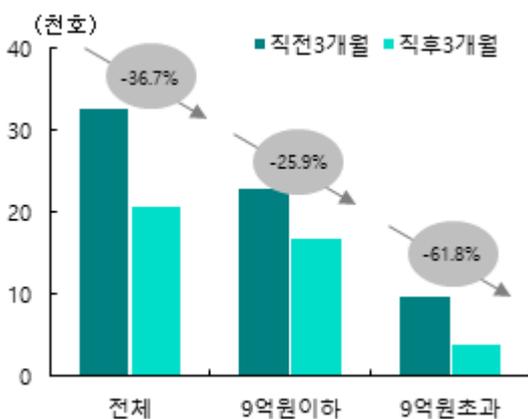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

■ ‘12.16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규제강도가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 상승 등 불안정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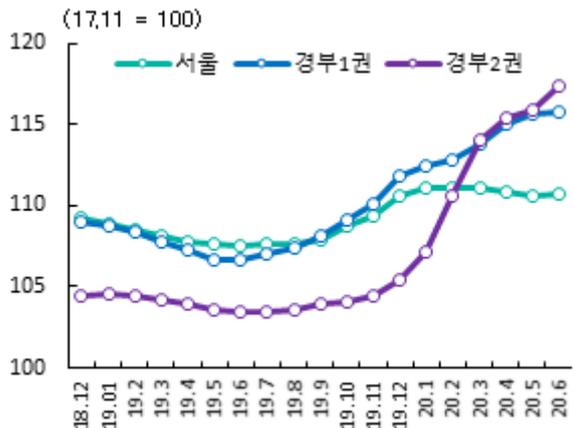
- ‘12.16대책’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전 3개월 대비 크게 감소(-36.7%)하며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세 전환
 - 특히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LTV규제가 더욱 강화(40%→20%) 되면서 거래량 감소폭(-61.8%)이 9억원 이하(-25.9%) 대비 2배에 달함
 - 강남3구(-66.9%) 및 마용성(-51.7%) 지역은 그 외 서울 나머지지역(-27.2%) 대비 감소폭이 더욱 큼
- 2020년 서울지역 주택시장이 소폭 하락 또는 보합권을 보이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남쪽의 정부1권역(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2권역(수원·용인·안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주택시장 불안 지속
- 이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원·안양·의왕 등 5곳을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풍선효과 차단 시도(‘2.20대책’)
 - 해당 지역은 광역교통망 확충 개발호재가 가시화되며 이미 추가 상승 기대감이 확산된 상황으로써 서울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외의 기타 요인도 작용
- ‘2.20대책’을 통한 신규 규제지역 확대에도 집값 상승 기대치가 여전히 높아 시장은 차기 주택가격 급등 후보지 물색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지정(‘6.17대책’)
 - 규제지역 확대 이후 인근 비규제지역 중 서울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남서부(인천·화성·안산 등)로 집값 상승 기조가 또다시 이동하자 정부는 김포·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

■ ‘12.16’ 이후 서울아파트 거래량 감소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리브온

■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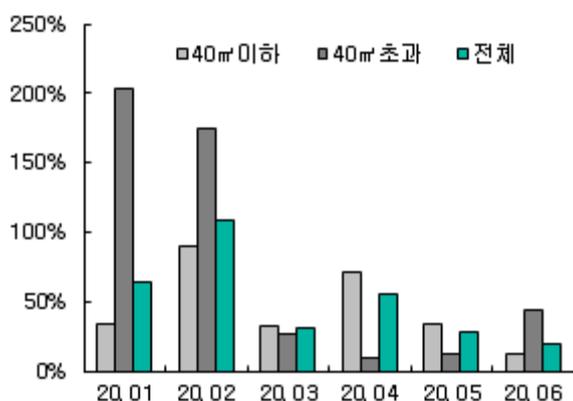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현상도 보임

-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의 오피스텔 거래가 증가
 -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아파트 대신 실거주 목적의 중소형 오피스텔(40㎡초과) 거래가 증가
 - '20년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48% 증가했고, 면적 40㎡초과 물건의 거래량 및 가격상승률이 40㎡미만 대비 더 높음
-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공실 우려로 상가거래는 감소
 - '19년말~'20.4월 서울 상가 거래량 31% 감소 (전년대비 3월 -37%, 4월 -32%)

■ 8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 대상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청약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도시로 청약열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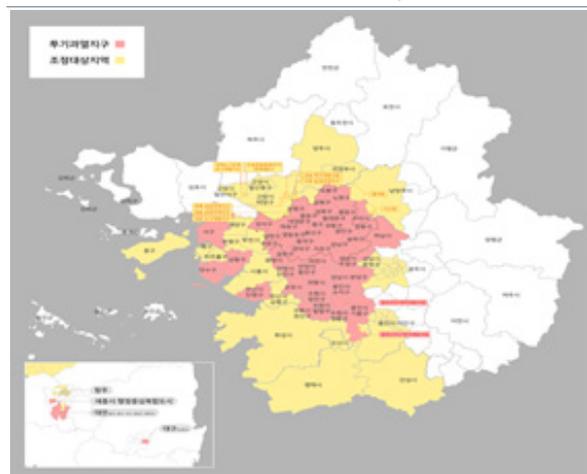
- 2020.8월부터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시점까지로 변경되어 청약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8월 이전까지는 청약시장 과열이 유지될 수 있으나, 8월 이후는 실수요자 및 장기적 투자수요 위주로 재편되어 인기지역 청약열기는 진정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투기세력이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가 미치지 않는 틈새지역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약열기가 지방도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존재

■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국토교통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20.7현재)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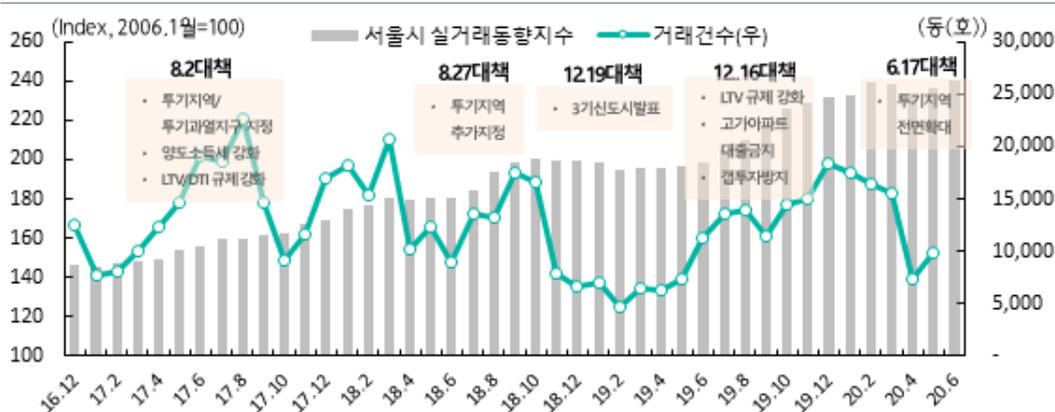
■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확대해 재고주택 공급활성화를 유도 중이나, 집값안정 효과는 제한적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확대 계획에도 가격 상승이 멈추지않자, 정부는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 보유부담을 높이고, 임대주택사업자 해택을 폐지함으로써 재고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 및 풍선효과 제거를 유도 (‘7.10대책’)
 -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증여 우회’를 통한 출구를 모색함에 따라, 정부는 퇴로차단을 위해 증여취득세 대폭 인상을 검토 중
- 단순 통계상 주택공급이(104%,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2018))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아 수요 억제가 시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할 도심의 아파트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

■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 투자수요로 인한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고강도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책이 병행 중이나 저금리를 활용해 규제허점을 노리는 투기자금에 의한 풍선효과가 반복
- 즉, 0%대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수퍼’ 유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틈새를 공략하는 투기자금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응책, 이로 인해 또다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반복되는 상황
 - 빈번한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에 혼동을 주는 동시에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잠재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도 존재
-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우며, 공급확대와 더불어 대체 투자처의 마련이 필요 **우**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와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동향지수



주 : 실거래동향지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데이터와 부동산114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통합해 부동산114가 만든 수치
 자료 : 부동산114

Lloyds, 보험 및 WM 사업 강화로 저금리 대응

오영선 연구위원(ohys@hanafn.com)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Lloyds는 보험 및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존 주요 사업에 비해 보험과 자산관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금리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Lloyds는 그동안 전문 투자회사인 Schroders와 제휴, 투자상담사의 대규모 채용 등으로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해왔다. 국내 금융그룹 역시 저금리 시대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보험 및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英 최대은행인 Lloyds Bank는 저금리 시대 대응을 위해 보험 및 자산관리 사업 확대^[1]

- 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0.75%에서 0.1%까지 인하하자 은행들은 이익 급감에 대처하여 수익 다변화를 추구
 - Lloyds의 순이자이익은 기준 금리 0.25%p 하락시 연간 1억5천만 파운드 감소
- Lloyds는 금리 변화로 인한 수익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보험과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기로 결정
 - 보험 및 자산관리 부문의 경상이익 비중은 Lloyds Banking Group의 15%를 차지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 시장에서 퇴직연금을 비롯한 보험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Lloyds는 자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카슈랑스 사업자로 보험 판매에 유리한 입장

- '90년대 영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자 방카슈랑스 사업을 잇달아 포기^[2]
 - 신용카드, 여신 상품과 보험이 결합된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로 문제 발생
- Lloyds는 투자자들이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인수한 Scottish Widows를 통해 보험 사업을 지속
- 경쟁 은행들은 Lloyds의 보험 사업 성과를 주시하면서 Lloyds의 실적이 긍정적인 경우 영국 내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1] "Lloyds to push further into wealth management and insurance", FT, 2020.6.29

[2] "Lloyds' growth relies on a bancassurance renaissance", FT, 2020. 6.30

■ Lloyds는 자산관리 역량 강화 목적으로 투자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 추진, 인력도 증원

- 2018년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은행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 ‘Insurance-Wealth’ 부문 조직을 신설
- 같은 해 투자 및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Schroder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자회사인 Scottish Widows의 보험 및 자산 관련 투자 관리자로 지정
 - Schroders의 투자 전문성과 Lloyds의 손님 기반, 채널 및 디지털 역량을 결합
- 또한, 150억 파운드 규모의 Zurich Insurance社 영국 퇴직연금 및 저축성 보험 자산을 인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50만명의 추가 손님을 확보
- 아울러, St. James’s Place, Rathbones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를 견제하고 손님 확대를 위해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700명 이상 채용³⁾

■ 국내 금융그룹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보험 및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최근 국내 주요 금융그룹도 보험사 인수, 조직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험 및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국내 보험과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면 영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바람직
- 디지털 플랫폼의 정교화와 상품 정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금융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이 요구되며 비대면 손님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온라인 상품 가입률이 아직 저조한 편이고 자산관리 서비스 역시 비대면 채널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적 

■ Lloyds 보험 및 자산관리 부문 이익 추이

구분 (단위:백만 £)	2017	2018	2019
순이자이익	133	123	112
기타이익	1,846	1,865	2,021
순이익	1,979	1,988	2,133
영업비용	(1,040)	(1,021)	(982)
기타비용	(40)	(39)	(50)
총비용	(1,080)	(1,060)	(1,032)
손상차손	-	(1)	-
경상이익	899	927	1,101

자료 : Lloyds Banking Group Annual Report

■ Lloyds 보험 및 자산관리 부문 상품군별 이익 추이

구분 (단위:백만 £)	2017	2018	2019	
보험	퇴직연금	256	486	507
	연금보험	213	244	277
	보장성보험	33	42	45
	장기 연금 및 투자상품	452	427	395
	생명보험	358	143	255
	일반보험	298	272	326
자산관리	369	374	328	
순이익	1,979	1,988	2,133	

자료 : Lloyds Banking Group Annual Report

[3] "Lloyds to hire 700 advisers in wealth management push", FT, 2019.2.11

코로나19로 글로벌 은행 채널 수요 변화 가속

김 효 섭 연구원(hyosupk@hanafn.com)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은행들의 채널별 수요 변화는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지점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한편,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들은 지점 채널구도 변화 및 비대면 채널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은행들도 급변하는 banking 트렌드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채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은행들의 채널별 수요 변화는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지점거래는 감소세 지속^[1]

- 2017년 대비 2020년 활성고객(주 1회 이상 거래) 비중은 모바일뱅킹(54%)이 15%p 증가한 반면 온라인뱅킹(55%)은 9%p 감소하여 비대면 채널 간 이용률이 상반
 - 향후 '23년까지 모바일뱅킹의 활성고객 비중은 지속 증가할 전망(73%)인 반면, 온라인뱅킹의 경우 활성고객 비중이 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은행 내점 고객 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줄어드는 추세이며, 비대면 채널 수요 증대 및 지점 수 축소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
 - 은행점포 이용 활성고객 비중 추이(%) : 30('17) → 22('20) → 16('23F)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 확산으로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모바일 플랫폼의 편리성이 확대되면서 모바일뱅킹이 핵심 채널로 부상

- 모바일 앱 UI/UX 개선에 따른 편리성이 증대되고 PFM, 대출신청 등 banking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모바일뱅킹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 모바일뱅킹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을 통해 대부분의 간편 은행업무(계좌이체, 잔액조회 등)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뱅킹을 점차 대체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모바일뱅킹 신규 고객이 빠르게 증가
- 반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은행들의 지점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점폐쇄 조치까지 더해져 점포 이용률은 급감

[1] "The New Normal - Retail Banking Channels in a Pre-and Post-COVID-19", GlobalData,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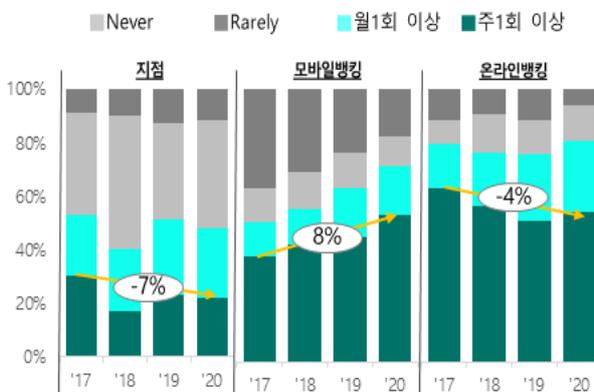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디지털 채널 전환 기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들은 지점 채널구도 변화 및 비대면 채널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

- 美 Chase 은행은 저효율 지점 통폐합을 단행하는 한편 스마트 점포 및 무인 점포를 확대하는 등 대면 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영업효율 증대를 도모
- 싱가포르 DBS는 신규 디지털 고객의 편의를 위한 튜토리얼, Webinars 등을 지원하고 소비습관을 분석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
- 호주 커먼웰스뱅크는 부동산 대출을 원하는 디지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물 조회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동산 앱을 구축
 -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대출 고객을 확보하고 대출 전담 상담사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E2E 서비스 실현

■ 코로나19로 급변하는 banking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채널 전략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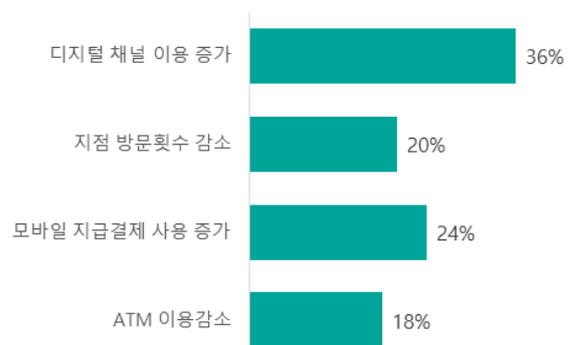
- 국내 은행들은 차별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도출하여 채널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경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대면 중심의 PB 업무를 화상상담 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
 - 무인점포 확대 및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 등 채널 전략을 다각화
- 특히, 신규 모바일뱅킹 고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UI/UX 개선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²⁾ 등이 더욱 확대될 필요 

■ 글로벌 은행 채널별 이용빈도 트렌드



자료 : GlobalData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금융 소비자 행동 변화



주 : 미국 11개 지역 91,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J.D Power

[2]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서비스란 고객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의미

금리: 금통위,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시사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글로벌 경기 회복 신중론과 통화완화 환경으로 대내외 금리는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고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심이 높았던 주택시장 유동성 풀림과 관련해서는 아직 통화정책이 경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시사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고 향후 정책 정상화를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당분간 금리는 경기 회복 불확실성 속 좁은 범위 내 등락하겠다.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되며 주요국 금리 하락

- 중국 6월 수출입과 2Q 성장률(3.2%, YoY)이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했으나 소매판매(6월 -1.8% YoY) 개선 지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중론 부각
 - 6월 중국 수출(YoY): +0.5%(예상치 -1.5%), 수입(YoY): +2.7%(예상치 -10%)
- 연준 인사들은 물가가 2%로 안착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고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 특히 일부 연준 이사는 중단기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YCC 도입 필요성 주장
- 주요국 금리는 미국채 입찰 호조와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장기화 기대, 위험자산 밸류에이션 부담 속 하락(美/英 국채 10년(%): 7.3일 0.67/0.19→7.16일 0.62/0.14)

■ 금통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상당기간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를 시사

- 7월 금통위는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파급효과 점검 필요성과 기준금리 실효하한 도달 인식 등으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0.50%)
- 통방문에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 전망(-0.2%)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되었고 총재는 2/4분기 지표 부진과 수출 회복 지연이 전망 하향의 배경임을 시사
- 또한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해야 하며 실물경제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어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
 - 아직 통화정책 정상화나 유동성 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님을 언급
- 금통위 결과로 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불균형보다는 실물경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금리 하락(국고3/10년(%): 7.15일 0.85/1.41→7.16일 0.83/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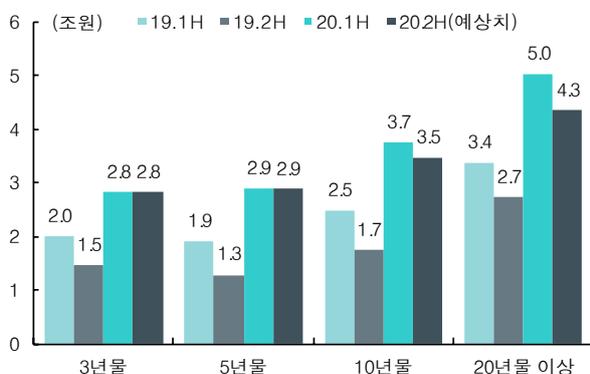
■ 국공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및 상승 위험 잠재

- 올해 세 차례 추정 편성 감안시 하반기 국채 발행 규모는 상반기 발행 실적(87조원) 대비 감소한 81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88% 급증
 - 연말로 갈수록 기관들의 채권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국채 발행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대비 적은 수준으로 발행
- 만기별 국고채 발행 규모의 경우 최근 은행과 자산운용사, 외국인의 중단기채 수요 증가를 반영해 단기채 비중을 늘리고 장기채는 상반기 대비 축소될 전망
 - 시중 유동성 급증과 자금의 단기화 성향 강화로 은행과 자산운용사 잉여자금이 증가했으며 외국인 차익거래유인도 확대되면서 중단기채 매수세가 크게 증가
- 한편 보험사가 자산 듀레이션 확대 목적과 해외채권 투자 여건 악화로 20년물 이상 초장기채 매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10년물은 여전히 뚜렷한 수급 주체 부족
- 뉴딜정책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으로 공사채 발행 급증, 내년 국채 발행 계획도 수급 불안을 자극할 수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반전시 금리 상승 예상

■ 국공채 발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은 개입 기대와 경기 회복 지연이 금리 상단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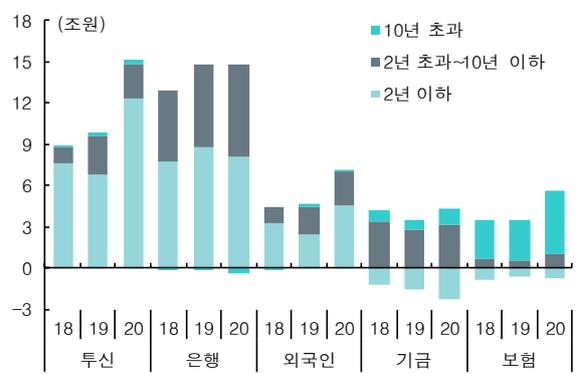
- 국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결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 가능성은 제한적
 - 금번 금통위에서도 채권 매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정책 언급이 부재했고 채권 매입 역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어나 단행될 가능성 시사
- 다만 전세계 코로나 확산 지속과 경기 회복 지연, 한은의 채권 매입 기대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하면서 당분간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78~0.90%, 1.33%~1.50% 범위로 예상 

■ 국고채 월평균 발행 규모



주 : '20.2H 기물별 발행 비중은 '20.5~6월의 발행 비중을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관별 채권 잔존만기별 순매수



주 : 1. 기간 중 월평균 순매수 규모, 2. 2020년은 1-6월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외환: 호재든 악재든 방향성을 기다리며

윤지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EU회복기금 논의 진전에 대한 기대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백신 개발 기대 등이 위험선호심리를 자극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위안화 역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며 방향성이 부재하였다. 수급 역시 공백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EU회복기금, 美추가부양책 논의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재차 결정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상하방 요인 혼재되며 1,200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지속
 - 중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장중 1,190원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및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로 낙폭 축소
 - EU 공동기금 및 백신 개발 기대로 유로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며 멕시코 폐쇄 등 신흥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낮추었음
 - 그러나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중국 소비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및 미중 관계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1,200원선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임

- 정책 기대에 따른 유로화 강세 속에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
 - 달러인덱스는 유로화 강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완화, 파월의장의 美 경기 불확실성 지속 및 통화완화 지속 발언 등의 영향으로 장중 95pt를 하회
 - 美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명에 근접하며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재봉쇄 조치를 시행
 - 달러/유로 환율은 EU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회복 기금 합의에 대한 기대 및 위험선호 심리 확대로 유로당 1.14달러대로 상승하며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7~18일 EU정상회의에서는 '21~27년 EU장기예산안 및 회복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합의 시 향후 4년간 유로존 GDP('19년 기준)의 +5.4% 효과 예상
 -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7.0위안을 하회하였으나, 6월 소매판매(YoY -1.8%/예상 0.3%) 부진으로 낙폭 축소
 - 한편 미국은 홍콩달러 페그제 약화 검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1)홍콩의 외환시장 방어능력에 대한 신뢰, 2)이후 백악관의 일축하는 발언으로 외환시장 영향은 제한됨

■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례적인 외환시장 개입 확대 및 향후 발생 이벤트 점검

- 안전통화의 대표인 스위스 프랑화(CHF)는 코로나 충격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화로 강세를 보였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강세폭 제한
 - 올해 CHF는 달러 대비 2.3%, 유로화 대비 0.8% 정도로 강세폭이 제한되었음
-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됨에 따라 美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H SNB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15%로 지정기준(개입 규모 2%이상, 6개월 이상)을 상회하며 경상수지(GDP의 2%이상), 무역흑자(\$200억 이상)조건도 충족
- 장기적으로 코로나 및 유로존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글로벌 중앙은행 등의 CHF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SNB의 통화정책 여력은 제한적
 - 현재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0.75%로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
- CHF 강세가 장기화 될 경우 SNB의 시장개입이 지속되며 1) 미국의 스위스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혹은 보다 극단적으로 2) SNB의 페그제 재도입을 통한 환율제도 변경 등으로 일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 수급 공백의 원/달러 환율, 화재든 악재든 방향성을 결정할 이벤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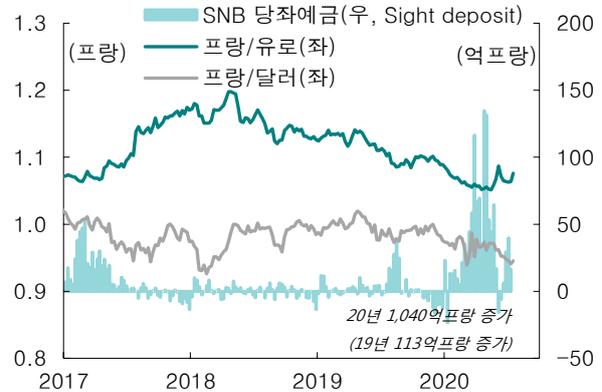
- EU 회복기금에 대한 논의 진전시 유로존 최초의 통합 재정 정책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원/달러 환율 하방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글로벌 증시 가격 조정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제한되는 가운데, 미국 추가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기다리며 1,200원을 중심으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전망 

■ 달러인덱스와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스위스 당좌예금 주간 증감과 프랑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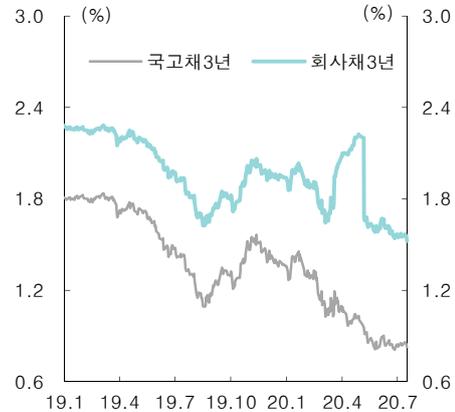


주 : SNB는 외환시장 개입을 연1회 공개하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을 proxy로 활용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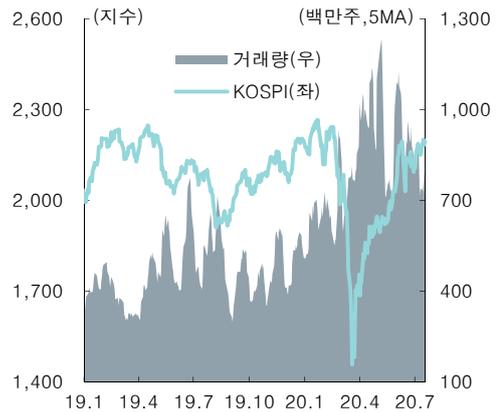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6월말	0.57	0.79	0.82	1.57	0.84	1.11
7월 10일	0.49	0.79	0.79	1.56	0.85	1.13
7월 13일	0.50	0.79	0.79	1.57	0.86	1.15
7월 14일	0.48	0.79	0.79	1.56	0.85	1.15
7월 15일	0.47	0.79	0.79	1.55	0.85	1.15
7월 16일	0.49	0.79	0.77	1.53	0.8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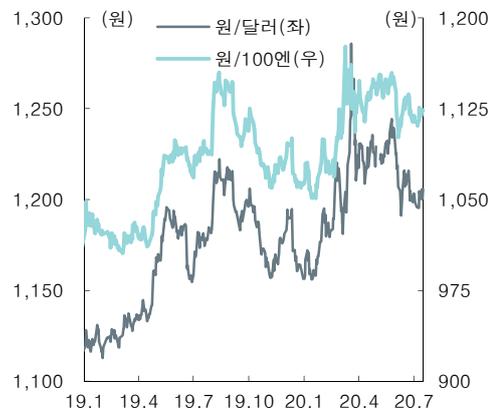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6월말	2,108.3	116,991	709	-733
7월 10일	2,150.3	120,481	887	-3,476
7월 13일	2,186.1	104,623	650	1,053
7월 14일	2,183.6	116,334	811	71
7월 15일	2,201.9	136,414	830	2,743
7월 16일	2,183.8	113,043	785	-1,322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6월말	1,203.0	1,114.4	170.3	1,351.7
7월 10일	1,204.5	1,126.0	172.1	1,361.1
7월 13일	1,200.9	1,119.2	171.6	1,362.3
7월 14일	1,205.7	1,124.4	172.1	1,374.2
7월 15일	1,200.5	1,122.6	171.8	1,369.7
7월 16일	1,205.6	1,123.6	172.5	1,372.4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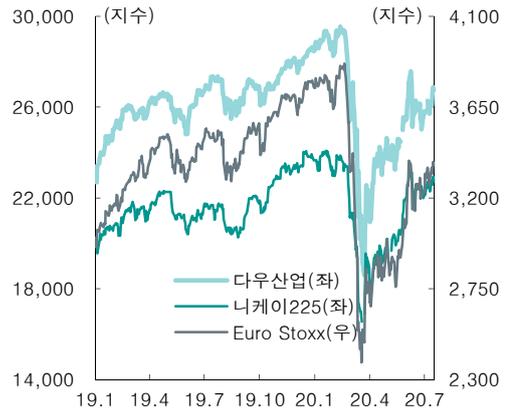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6월말	0.08	0.23	0.15	0.66	0.05	-0.40
7월 10일	0.09	0.23	0.15	0.64	0.04	-0.42
7월 13일	0.09	0.23	0.15	0.62	0.03	-0.45
7월 14일	0.09	0.22	0.16	0.62	0.04	-0.44
7월 15일	0.09	0.23	0.16	0.63	0.03	-0.47
7월 16일	0.09	0.22	0.15	0.62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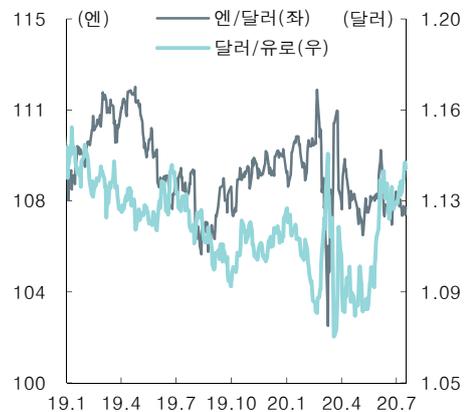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6월말	25,812.9	22,288.1	2,984.7	3,234.1
7월 10일	26,075.3	22,290.8	3,383.3	3,296.2
7월 13일	26,085.8	22,784.7	3,443.3	3,350.0
7월 14일	26,642.6	22,587.0	3,414.6	3,321.4
7월 15일	26,870.1	22,945.5	3,361.3	3,378.2
7월 16일	26,734.7	22,770.4	3,210.1	3,365.4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6월말	107.87	1.124	42.7	1,800.5
7월 10일	106.89	1.130	-	1,801.9
7월 13일	107.29	1.134	43.4	1,814.1
7월 14일	107.23	1.140	42.8	1,813.4
7월 15일	106.94	1.141	44.2	1,813.8
7월 16일	107.22	1.138	43.4	1,800.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7월 18일 인쇄

2020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5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